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11. 11.(금)
담당 부서	학교교육지원관 동북아교육대책팀	책임자	팀 장 김주영 (044-203-7040)

교육부는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언론사명 : 경향신문 / 2022. 11. 10.(목)
- 제목 : 교육부 “의견 수렴했다” 더나...회의는 시안 공개 하루 전 단 1차례만

<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>

- 교육부가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전,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하여 ‘자유민주주의’ 등 용어를 행정예고 시안에 반영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- 교육부는 그동안 ‘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’이라는 취지에 따라 정책 연구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,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,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.
- 지난 8월 30일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, 시안의 편향성 지적 등 모든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하여 수정·보완을 요청하였으며, 각론 조정위원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에서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 - 각론조정위원회(9.21.)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 및 방식을 참고하여 역사 교육에 대한 반복적·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·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하였습니다.

- 개정추진위원회(9.26.)에서는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진이 자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를 연구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.
 - 공청회 시안(9.30.)에서 ‘6·25 남침’ 반영 등 일부 사항은 연구진이 자체 보완하였으나, ‘자유’ 가치를 반영한 ‘민주주의’ 용어 수록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,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등에서 추가적으로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.
 -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(10.14.)에서는 연구진 시안의 ‘민주주의’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어, 위원 전원이 ‘자유민주주의’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 - 개정추진위원회(10.20.)에서는 ‘민주주의’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, 헌법, 관련 법률, 현재결정례, 역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‘자유’를 반영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여러 위원 간 의견이 양립하였습니다.
 -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(11.7.)에서는 ‘자유민주주의’, ‘민주주의’, ‘자유민주적 기본질서’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정 방안에 대하여, 일부 반대(1명)를 제외한 위원 대부분이 동의(18명)하였습니다.
- ※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당일(11.7.) 참석위원 19명 중 3명은 교통 여건(영등포역 탈선에 따른 열차 지연) 때문에 회의 종료 후 도착하여 추가 의견 개진
-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,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·고시할 예정입니다.